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1월 18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과	담 당 자	• 에너지정책과장 • 담당자	박광근 ☎440-5023 안성주 ☎458-713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영흥화력 조기폐쇄 논리와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
- 18일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추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 영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원정책 및 지역산업 전환모델 등 연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및 계획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에너지교육센터가 수행한다.

이 자리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영흥면 외2리 이장, 발전노조 사무처장, 영흥화력발전본부 녹색환경부장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폐쇄에 앞서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대상 및 영향분석, 지원 정책 및 지역산업 전환모델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들이 변화를 미리 인지해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논리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영흥석탄화력 발전소 1, 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민선8기 공약으로 선정하고 산업부 및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 조기폐쇄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폐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기폐쇄 논리를 강화하고 시민환경단체와 공동 대응해 조기폐쇄를 지속으로 건의 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고보회에서 김인수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영흥화력 조기폐쇄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번 용역에서 인천만이 아닌 수도권까지 영흥화력의 조기폐쇄를 요구 할 수 있는 논리 마련”을 주문했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 등 시대적 변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